



공군부대 주둔으로 지난 1966년부터 출입이 통제된 무등산 정상에 개방행사에 맞춰 무등산에 오른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지난 2011년 봄부터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매년 4차례 열리고 있으나 시민들은 부대가 하루속히 이전해 무등산을 온전히 되찾기를 열망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전부지 지자체 설득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국립공원 지형 3년 무등산 옛모습 찾자

● 군부대 이전 속도 내자

기본·실시설계 이달 중 발주 광주시·국방부 적극 공조를 총선·대선공약 활용도 필요

사업의 결렬을 해소해 고삐를 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속도감 있게 부대 이전을 하도록 대선정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선정국을 놓치면 부대 이전은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무등산 군부대 이전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무등산 군부대의 이전 부지가 선정되고 해당 부지에 맞는 작전성 검토, 무기 배치 계획, 막사·무기고 등 부대 건립 계획(설계도 포함)이 수립되는 등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500억원으로 막연히 추정되던 부대이전 비용이 구체화된다.

무등산 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열망하는 시민들 입장에선 국방부 예산이 편성되는 내년 5월까지 용역을 통한 세부계획과 예산 규모를 확정, 2018년도 정부예산에

이전비용을 편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부대 이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부대 이전 예산을 정부 예산에 담기 위해선 올해 총선과 내년 대선을 적극 이용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편성된 15억원의 예산이 2년 안에 집행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는 것도 광주시가 고삐를 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문제는 부대 이전을 위한 기본 전제는 무등산 군부대가 옮겨갈 예정인 지자체 설득이다. 대체부지 선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부대 이전 계획수립(용역)은 물론 사업 자체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로서도 검토를 통해 이전 부지를 좁히더라도 해당 지자체가 반발한다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광주시가 대체부지로 지목되는 지자체

를 설득하기 위한 인센티브(재원)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이끌어낸 컨트론타워 구축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에서 무등산 군부대 이전 실무를 담당할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지역민의 숙원인 무등산 군부대 이전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지역 공약으로 내세워 이전기간 단축 등 정치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면서 “혹시라도 국방부에 무조건 끌려다녀선 안 되고 대체부지 지자체 설득 등 주도할 부분은 광주시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대이전의 첫 삽을 뜬 만큼 국방부와 원활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무등산 정상인 천양봉 해발 1187m 고지에는 공군 제 8331부대(방공포대)가 1966년부터 주둔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교육부, 장휘국·장만채 교육감 고발

“시국선언 교사 징계명령 어겨” 장휘국교육감 “인사권 무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려는 교육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14개 교육청 교육감을 2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육감에게 참여 교사 징계를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4일 징계명령을 따르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3월9일 이내 징계의결요구가 포함된 세부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후 기간 내 징계의결요구를 반영한 세부이행계획을 제출한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감들을 대검에 고발했다. 나머지 교육감들은 ‘검토 중’이나 ‘3월말까지 징계하겠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와관련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직무와 관련해 발언한 것일 뿐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14명의 교육감들을 고발한 것은 인사권이 교육감 권한인 점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대 총장선출 방식 2개안 9일 공청회

이달말 총투표후 최종안 확정 대학본부 수용은 미지수

차기 전남대 총장을 어떻게 뽑을 지 가늠할 ‘물’이 공개된다. 최종안은 이달말 교수 총투표를 거쳐 확정된 뒤 대학측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대학본부가 교수회 결정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전남대학교총회(회장 김영철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오는 9일 오후 2시 대학본부 용봉홀에서 ‘총장선출제도 및 교수회 위상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3일 밝혔다.

교수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총장선출 및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2개의 총장 선출 방식을 공개한다.

이날 공개될 총장 직선제 방안은 기존 교수들 위주의 투표 방식을 벗어나 직원·학생 뿐 아니라 조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했다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 조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적은 없었다는 게 전남대측 설명이다. 구성원별 참여비율은 교수 84%, 직원 12%, 조교 2%, 학생 2%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차 정책평가단과 2차 정책평가단

으로 나눠 운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간선제 선출 방식도 공개될 예정이다.

간선제의 경우 우선, 5명 이상의 후보자가 나설 경우 교수·직원 200명으로 구성된 기청 정책평가단을 꾸리고 후보별 공약 검증·서류 심사·토론회 등을 거쳐 5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려내 2차 정책평가단인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넘기는 방식이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이후 2차 정책평가를 진행,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방안으로, 위원회 인원을 ▲교수 72% ▲직원 13% ▲외부위원 10% ▲조교·학생 5% 등의 비율로 60명으로 할 지, 180명까지 늘려 구성할 지는 공청회 뒤 교수이사회(10일)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원)장 선출방식과 단과대학(원) 교수회 활성화 방안 등도 제시된다.

김영철 전남대학교총회 회장은 “권력과 자원을 통한 대학통제가 심화하면서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크게 퇴보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대학의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 23.72명...전국 평균 2.5배

차량 급증 불구 도로 개설 미흡 열악한 교통시설 개선 투자 필요

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14년 1만154건에서 2015년 1만516건으로 362건이 늘었다. 사망자수는 427명에서 413명으로 14명 줄었지만, 부상자수는 1만6715명에서 1만7164명으로 449명이 증가해 1만7000명선을 넘겼다.

2014년 98만9224대였던 전남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년만에 5만7824대(5.85%)가 추가돼 104만7048대로 집계됐다.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는 25만3758대에서 24만6455대로 7303대가 급감했지만, 사업용(1만8469대)·비사업용(3만7305대) 등 자동차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2014~2015년 1년간 도로는 국도 6km, 시도 2km, 군도 11km가 더 설치

됐을 뿐이다. 도로·교통시설은 정제 상태에 있지만,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181명으로, 전체(413명)의 43.8%를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차대차가 165명(40.0%), 차대사람 130명(31.5%), 차량단독 118명(28.6%)의 순을 보였다. 도로종류별로는 시도(市道)에서 10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일반국도(105명), 군도(89명) 등에서도 사망자가 상당했다.

시기별로는 지난해 10월(48명),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73명)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목포 1523건, 순천 1479건, 여수 1327건, 광양시 863건, 나주시 636건 등 주로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군에서는 영암이 587건으로 독보적인 1위였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50개소 중 목포가 15곳, 순천 11곳, 여수 7곳, 영암 6곳 등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차량밀집도가 낮아 평균주행속도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 노약자가 많은 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등 233곳에 352억2100만원을 투입해 지방도 도로안전 개선사업, 30곳에 12억75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사업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내 폭행으로 붙잡힌 남편, 필로폰 투약까지 들롱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40대 남성이 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들롱.

○...3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모(44)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에 순천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

태로 아내(43)를 흉기로 위협하며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

○...조씨는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한 고등학생 딸(17)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마약전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조씨가 조사과정에서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자 소변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구례 지리산, 온천지구내 알프스모텔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현재 휴업상태,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 용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리모델링 후 (3억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